

광주시, 1580억 투입 '장애인 친화도시' 만든다

2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4년간 일자리 740개 창출 등 5대 전략 42개 세부사업 추진

광주시가 올해부터 4년 간 1580억원을 들여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을 설계해 '장애인친화도시'를 추진한다.

12일 광주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 설계를 통해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장애인 친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 스마트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580억원을 투자해 '삶에 행복을 있는 장애인친화도시광주'를 비전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권친화공동체 조성 △장애인 문화·교육·체육 기반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유형별 지역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 42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장애인 취업 지원 및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맞춤형 일자리 74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기관 컨설팅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애인 생산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시설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돕기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보호종료 장애아동과 장애 청년의 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조기 개입 원스톱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 기능도 확대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 등 장애인 권익보장기구 6개를 설치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체육 기반도 마련한다.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특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활동 거점기관을 육성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분야는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5개 자치구를 평생교육 도시로 지정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체육분야는 장애인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해 5개 자치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증진을 위해 장애인 e스포츠를 육성할 예정이다.

비장애인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상버스 법정대수 충족에 주력하고, 무장애 정류장과 장애인보호구역 등을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원한다.

탈시설 장애인 지원 주거형 및 체험 주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탈시설 완료

장애인에 대한 중단 연구와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장애인정책 종합계획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해 장애 유형별 지원 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현재 여러 지자체가 장애인친화도시를 선포했지만, 제도 마련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광주는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 장애인친화도시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전남도, 소상공인 5년간 3조3천억 보증공급

보증재단에 5년간 300억원 출연

전남도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5년간 3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전남도는 소상공인 신용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5년간 300억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매년 6600억원씩, 2027년까지 3조3000억원 규모로 보증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매년 300억원씩 증액해 5년간 1조 5500억원을 신규 보증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연속착륙을 위해 1조 7500억원을 보증해 6개월의 상환유예와 1년의 만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와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해 신용 등급에 관계없

이 대규모로 보증했지만 올해부터 금리 상승에 취약한 중·저신용자와 성실사업 실패자를 위한 보증을 확대한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에게 신규 보증 7825억원을 실시해 보증 점유율을 48.4%에서 55%까지 확대한다. 이는 전국 평균(41.6%)보다 13.4% 높은 규모다.

성실 사업 실패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제도전 전용 보증에도 향후 5년간 700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장기 연체자의 단계별 신용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1단계에선 대위변제 된 보증채권의 연체이자 전액을, 2단계에선 보증채권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3단계에선 채권소각을 통해 재기·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최항지 기자



김영록 지사, 산불대응 상황 점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1일 곡성군 산불대응센터를 방문, 이귀동 곡성부군 수로부터 산불방지대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구직 단념·자립 준비 청년 '사회 진입' 돕는다

전남도는 구직 단념·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8억9000만 원을 들여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 중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또는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이다.

또 보호 종료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과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이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을 포기한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육구를 고취시켜줄 '심리 상담', '진로 컨설팅', '자신감 회

복',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단계와 장기로 나눠 운영한다.

단계 프로그램은 1~2개월 동안 40시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참여 후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과정이다.

장기 프로그램은 5개월간 200시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대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새일미래센터(061-755-9216)와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일자리 컴퓨터(061-243-1079)로 신청하거나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고용 복지정책→청년도전지원사업에 등록하면 된다. 최항지 기자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본격화

민선8기 시·도 상생과제 제2호 '바이오 미래산업' 확보 맞춘

광주와전남도가광주·전남상생협력과제인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화순군,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관계자 및 전문가 3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기존 두 곳의 첨단 의료복합단지(충북 오송, 대구) 장·단점을 분석하는 한편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과 지역 수요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성 방안

을 논의했다.

전남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부터 임상, 인증, 제품화까지 전주기 인프라를 갖춘 '화순 백산산업특구'에 첨단바이오신약 개발 전진기지를, 광주는 의료산업 및 인공지능산업 인프라를 집적된 '첨단지역 의료특화단지'에 AI기반 융복합 의료기기 인프라를 갖추는 등 초광역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 백산산업특구(화순 소재)는 2002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과 2004년 화순전남대병원 개원에 이어 2009년 (주)GC녹십자 화순공장 유치 등 20여년 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이룩한 국내 유일 백산산업

특구다. 현재 화순전남대병원을 비롯한 15개 지원기관과 33개 기업이 집적화된 산·학·병·연 연계형 바이오 클러스터가 구축돼 있다. 광주는 의과대학·치과대학 4 곳과 한국광기술원 등 연구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등 지원기관으로 이뤄진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국내최대치과클러스터인 '치과용소재 부품기술지원센터'와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구축 등 치과 중심의 생체의료소재 부품산업을 특화했다. 이후 안과, 정형외과,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과 피부의학을 결합한 신개념 고기능성 화장품인 코스메디케어 산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박상지 기자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지역 교원 기피 심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사진)은 지난 9일 열린 제 369회 임시회에서 전남도교육청 현안질의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교원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들로 메워지고 있다"며 "징계교사 전보도해남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교원역량의 격차가 생기면 지역교육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여 교육력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증가하고 도농간 교원 역량 격차가 심화 되는 등 전남교육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전남도교육청과 지역청이 한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형대 의원은 "교육 경력이 풍부한 교사들이 농·어촌지역을 기피하게 되면서 공립초 교사들이 신규교사 혹은 기간제교

사들로 메워지고 있다"며 "징계교사 전보도해남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교원역량의 격차가 생기면 지역교육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여 교육력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증가하고 도농간 교원 역량 격차가 심화 되는 등 전남교육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전남도교육청과 지역청이 한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항지 기자

광주시, 차세대 우주 광통신기술 육성

시·한국전자통신연 업무협약

광주시가 차세대 우주 광통신기술 육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광양함·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지역 주력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미래 산업환경에 대응한 지속 성장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에트리·ETRI)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광주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ETRI 호남권연구센터에서 진행됐

으며,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에트리 방송 안장, 강현서 호남권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에트리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지역 주력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기업 육성 지원 △'지상 중심'의 지역통신 기술을 차세대 우주 광통신 기술로의 확장 △미래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 등이다.

광주에 뿌리를 내린 에트리는 그동안

지역에서 광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최초 미국A2LA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 자격 취득, 국내 최초 광가입자망인프라 및 서비스센터 개통, XG-PON 시스템 개발, 국내 최초 CoAP IoT 표준 프로토콜 개발, 100기가급 광통신 부품 국산화 개발 등 많은 연구 성과를 이뤄냈다.

또 에트리가 광양합제품 국제공인(A2LA) 시험 지원 등 광산업체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광통신 분야 지역 기업인 ㈜우리로(2012), ㈜이솔루션(2014), ㈜피피아이(2019) 등 코스닥 상장에도 기여했다.

박상지 기자